

밀월과 소원의 중국-북한관계

금희연 / 연세대 국제교육부 초빙교수, 정치학 박사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불통불난(不統不亂)' 즉 한반도에서 통일로 인한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이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시각에 바탕하여 중국은 두개의 한국정책을 추진.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쌍경분리'에 입각한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접어 들며 변화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미온적인 대북한 지지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최근 한국형 경수로 채택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한 설득 및 압력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북한 관계는 한마디로 '밀월과 소원'의 반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지금까지 양국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서로간의 관계를 조정·설정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파괴하는 급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도 양국 관계는 밀월과 소원의 양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의 기본 목표는 국익이며, 중국의 외교정책 또한 이러한 국익의 극대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상충하는 국익 속에서 중국과 한국 관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국의 현실적인 등거리 외교의 실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I. 서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 내치국면에

놓여 있던 북미회담이 극적인 타결을 보아 한반도에 새로운 안정과 평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검색국면에 놓여 있던 남북간의 관계도

한국기업인의 방북으로 협력의 싹이 움트고 있다. 소련이 작년 말부터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쌍무적인 관계개선만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쉽사리 답할 수 없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이 지역의 국제적 및 지역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으로는 친북한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중국의 실리적 등거리외교는 작년 11월 1일자 인민일보 1면에 이봉총리의 방한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접견모습과 강택민(江澤民) 총서기와 북한의 정두환 조통위 의장 접견사진을 나란히 실은 것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한중수교 2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북한과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 것인가를 알지 않고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을 중국식 개방체제로 유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1990년대, 특히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원칙과 상황논리에 입각한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전략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대한반도 시각

중국은 주변강국인 미·일·러와의 우호적 관계유지와 4개 현대화의 성공을 대외정책의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여 '독립자주적 평화외교',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중대', '전방위외교'라는 대외정책기조를 추진해 왔다.¹⁾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대, 대한반도 영향력 중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대한 경험 중대 모색을 중시하고 있다.²⁾ 우선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구축을 촉구하고 주변강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 또는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다. 즉 일관되게 강조해온 '반패권'(反霸權) 원칙을 한반도에도 적용시킴으로써 주변강국의 패권행위나 강권정치를 배제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과의 교류를 유지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중간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일본보다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1) 「江澤民在中共十四大的報告」, 「人民日報」, 1992. 10. 21.

2) 민족통일연구원, 「중국의 대북한정책: 현황과 전망」, 1992, p. 8.

한 중국은 폐쇄적인 경제정책 고수가 북한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함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게도 경제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조제공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역내 강대국과의 기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쟁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국제적 환경요소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요소도 고려되고 있음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경제사회가 발전하는 이면에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의 인기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즉 '신념의 위기'라 불리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곧바로 중국의 사회주의의 장래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불통불난'(不統不亂), 즉 한반도에서 통일로 인한 새로운 강국의 출현이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이른바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립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 정책인 것이다.³⁾

3)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한민족이며, 모순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중국의 대북한 태도 변화는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더 이상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철회와 IAEA에 의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게되자 '제재불가', '관련 당사국간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론을 앞세웠다. 즉 남한이나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해하며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도 유해한 것이라는 현실론적인 발상이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모험주의가 중국의 한반도 기본정책이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남북한간 긴장의 지속은 북한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안보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의 핵이 한국과의 핵경쟁이나 통일후 한국의 핵무장과 연계될 때 중국에 가해 질 안보적 위협은 상당한 수준일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유의 현실주의적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을 최소화 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원칙 고수와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대원칙만을 정한 뒤 중국은 배후에서 조용히 자국의 입장을 제시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로 요약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왔다.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수단만을 고집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과의 갈등의 소지는 다분하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한반도의 정세안정'에서 찾으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강압적이며 적극적인 직접적 설득보다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중국의 군사정전 위원회의 철수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40여년 동안 휴전체제를 관리해 온 군사정전위는 현상유지를 위해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나 중국의 철수로 이제 위기관리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결정은 그간 북한이 대내, 대외 목표의 쟁점으로 삼아 온 한·미 평화체제 구축공세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가세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한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에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과 미국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중국은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양개조선'(兩個朝鮮), 즉 두개의 한국정책을 취하고 있다. 두개의 한국정책이란 정치적으로는 북한

의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지원 또는 지지하는 명분을 축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정경분리'(政經分離)에 입각한 이중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이분화 정책에 대한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중국은 1992년말부터 시행하려 했던 대북한 경화결제 요구를 연기해 주었고,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식량, 원유,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북삼성의 조선족을 통한 한국정부의 대중국 영향력 행사가능성에 대한 견제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불통불난(不統不亂)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데에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통해 북한 일변도의 대한반도 정책을 남북한 등거리로 전환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취하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일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발빠른 중국의 대응은 결국 중국을 최대의 수혜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기존의 구도에서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코리아 카드'(Korea Card)를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탈냉전기의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성과 실험성이 감소된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감소되는 대신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국의 최대목표인 성공적 개혁·개방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대외환경을 불리한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라는 시대상황적 요인과 중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대외관계에서 이념적 요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주변정세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변국에 대해 군사안보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소련이 붕괴된 상황에서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노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서 보이는 북한과 중국간의 정책상의 이견이나 견해 차이는 곧 양국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라기 보다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에서 야기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북경-평양-모스크바를 잇는 북방 3각관계의 연계는 더 이상 과거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랜 기간의 중소간 이념분쟁이나 국경분쟁을 통해 악화된 양국관계가 호전

되기는 했어도 유대감은 1950년대의 그 것에는 미치지 못하며,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에서도 혈맹이니 치순관계(齒脣關係)와 같은 상징적 유대감은 잔존하고 있으나 이미 1978년부터 두 체제간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구하는 목적, 그 실천방법에는 상당한 괴리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각과 태도 변화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에서 기인한 것으로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했던 정도에 비해 중국이 북한을 의식하는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공산정권 수립 이래 중국은 북한이 보유한 협상력이나 행사할 수 있는 협상조건을 의식하여 북한을 외교적 및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자체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북한을 지원·이용했던 것으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이나 이해에 따라 약소국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패턴인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의 우방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군사동맹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후견인 역할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1993년 12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자 한반도 비핵화와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해 온 중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몰고 올 후유증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우선 남북간의 긴장 지속은 중국에게도 안보적 부담이 되기에 충분했고 북한의 핵이 김일성 사후

불확실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내의 모험주의자들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의 구실로 되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정당화시킬 것이며 이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지역안정세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재평가를 하려는 중국의 입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군사화와 정치화를 부추키는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금년에 만기되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대해 일본이 유보의 뜻을 시사한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안정 파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중국이 지금까지 경수로의 명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온 북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표시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8일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한국형 원자로라도 한국이라는 원산지 표시만 없다면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해 10월 제네바 북미 핵합의에 따라 지원받을 원자로가 한국형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북한이 불과 5개월여 만에 경수로 타협안을 처음으로 제시해온 것이다. 이

러한 태도변화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한·미·일 3국의 입장이 강경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중국의 설득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작년 말부터 중국은 북한이 듣기에 다소 쉬운 발언을 해오고 있었고 북한도 이봉 총리의 한국 방문후 양국관계가 빠격할 정도로 냉각되기도 했었다. 특히 북한이 일관되게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제네바합의마저 폐기할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자 드디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합의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즉 지금까지 북한의 언행에 침묵을 지켜오던 중국이 드디어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심국방(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미 지난 3월 9일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와 북미합의 폐기 시사에 대해 “북한과 미국간의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온화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며 중국은 한반도에 이와 같은 평화분위기를 조성한 제네바합의가 준수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 이러한 중국의 대북한 태도와 입장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조선일보」, 1995년 3월 10일.

IV. 밀월과 냉각의 중국과 북한관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밀월'과 '냉각'의 반복으로 이해할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인해 중국과 북한관계는 상당한 정도의 소원관계로 냉각되었다. 북한은 중국이 제국주의에 굴복한 배반자이며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만이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신랄히 중국을 비난했다.⁵⁾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93년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1992년 김일성 생일에 양상곤(楊尙昆)을 위시한 대규모 축하사절이 파견된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북한과 미국, 한국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과 북한관계는 더욱 냉각되게 되었고 원유 및 석탄에 대한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는 북한에게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지기 시작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지원을 감축시키게 되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 안보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⁶⁾ 북한의 군사지원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북한은 1992년 12월 대중외채 상환 요구를 거부하고 대중국 접경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냉각관계는 오래지 않아 화해의 단계

에 접어들게 되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밀월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보다는 중국측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대북한관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⁸⁾ 무엇보다도 중국을 다급하게 만든 것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화해였다. 1993년 4월 29일 방한중인 러시아 외무차관 콜코모프(Kolkomov)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천연가스 와 제한적이긴 하나 무기공급을 재개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의 대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7월 23일 중국은 조선전쟁승리 50주년 기념시 호금도(胡錦濤) 중앙정치국상무위원과 지호전(遲浩田) 국방부장을 북한에 파견하여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⁹⁾ 이봉 총리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 경제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중국은 동참하지 않을 것을 밝힘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화해 태도는 북한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졌다. 1994년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지속

6) 「鏡報」, 1993년 6월호.

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3, 1993, p. 5.

8) 중국으로서는 국가 최대목표인 개혁·개방의 안정적 추구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안정이 필요했고, 불필요한 북한과의 마찰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9)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China(FBIS CHI)* 114, July 29, 1993.

5) 「鏡報」, 1993년 6월호.

되었고 중국과 북한관계는 더욱 긴밀해 지는 것으로 보였다. 동년 6월 최광 참모총장의 중국방문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군사지원 약속을 받아냈다.¹⁰⁾

북한과 중국간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1월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북한과 중국관계의 소원을 전적으로 한국과 중국관계의 심화와 발전의 결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긴 하나 실제로 지난 해 11월 이봉 총리의 방한 후 양국관계가 뼈저거리는 징후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양국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은 북한이 1994년 12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다시 비난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비록 간접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핵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개입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 기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3의 국가가 한 역할은 전혀 없으며, 남북대화에 대해 모 국가가 건설적 역할이나 중재 운운하는 데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 한 것은 “남북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봉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¹¹⁾ 끝이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현준극의 중국방문시 받은 홀대는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국제부장은 북한과 중국공산당간의 교류를 책임을 지고 있는 중책으로 중국의 당총서기가 접견하는 것이 상

례였다. 실제로 황장엽 전국제부장의 방중시에는 강택민이 직접 접견했으며, 이숙정(李淑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시에는 김일성이 친히 접견한 것에 비하면 현준극에 대한 외교적 비하는 하나의 사건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다.¹²⁾

그러면 중국의 대북한 입장이나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국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음을 볼 때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중국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북한의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남게 되었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 또는 옹호해 줄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국이자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낙후된 북한경제의 회생에 여전히 중국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특히 식량과 원유의 지원은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 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및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역할이 무리 없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

11) 외신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봉 총리가 “이럴 수가 있나”라면서 화를 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가 하루 뒤인 12월 2일 현준극의 방문에 대한 예우가 격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일현, “북한-중국, 이봉 방한 후 뼈저”, 「중앙일보」, 1994년 12월 17일.

12) 「중앙일보」, 1994년 12월 17일.

10) FBIS-CHI 113, June 13, 1994.

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로도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북한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현상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대한반도3불정책'(對韓半島三不政策)¹³⁾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의 출발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상이한 신념체계에 의해 통일될 경우 중국의 위기의식은 상당히 커진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중국인의 속셈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의 도래는 자국과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 변방지역의 안정과 자국의 체제유지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당면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의 수호는 향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국정의 지상목표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회

주의체제 하의 북한정권의 존재가 필요하며 비록 개인승배에 대해 반대하기는 하나 김정일 체제를 승인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V. 중국-북한 관계의 전망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도 덩소평 사망후의 후계구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과 북한 관계를 변화와 지속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재조정 또는 재평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서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이 불필요한 주위환경의 변화나 급작한 현상과괴로 인해 저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시급하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적 대결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안정적 주변환경의 유지 또는 조성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경제발전 우위의 외교정책 기조는 구소련 및 동구의 몰락이 경제정책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¹⁴⁾ 중국이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국가와

13) 이는 「社會主義不毀損政策」, 「不同盟政策」, 그리고 「不敵對政策」으로서 북한의 체제가 점진적이어야 하며 급작스럽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 붕괴되는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한국-미국, 북한-러시아간의 동맹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한반도 통일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4) Yang Qixian, *Chin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1990s* (Beijing: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4 (April 1993).

불필요한 마찰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예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1993년 5월 미국이 대중국 최혜국대우 조건 부여를 1년간 연장하는 대신 중국은 반체제 인사인 서립문(徐立文)을 12년 만에 석방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무마시켰고 미국의 대만에 대해 150대의 F-16 전투기 판매 결정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물러서 별다른 보복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¹⁵⁾

둘째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과거 일시적이긴 하나 누렸던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고 북한의 협상 지렛대(bargaining leverage)가 약화된 시점에서 과연 중국과 북한이 상대방에서 필요로 하고 또한 의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북한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틀 속에서 정치·외교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공동의 적'(mutual enemy) 또는 '급박한 적'(immediate enemy)이라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 절박하고 급진적 변화를 야기시켜 현상유지를 파괴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각자의 국익과 이해의 득실에 의해 필요한 경우 상부상조함으로써 선린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의 선린관계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할 정도의 소원한 정책만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안문사태 이후 실추된 중국의 대외 이미지 회복에 북한의 모험주의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미관계의 진전에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적 협력이나 안보관계의 증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이념적 유대관계의 지속이 더 이상 중국의 대외정책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아님을 천명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말 소련의 소멸로 인해 중국이 사실상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후부터 계급투쟁은 더 이상 대외정책노선 상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반제투쟁'(反帝鬪爭)에의 동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실용적인 기술관료들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관계도 실리적인 현실외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의 원로들에 비해 혈맹책무(血盟責務)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념적 유대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¹⁶⁾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중국간의 실리적인 경제협력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유지를 위한 다자간협약에의 참여나 지역경

16) 중국외교의 기본 출발점은 중국이 얼마나 개혁·개방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공을 중시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중국이 최대의 국가 목표로 설정한 4개근대화의 성공에는 대내개혁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며,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역내의 주변국들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지속이 필수적이라는 중국정부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 「한국일보」, 1993년 6월 1일. *FBIS-CHI*, October 15, 1992. pp. 9~10.

제공동체에의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 자연히 양국간 안보상의 공동인식을 확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및 안보상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과 북한관계의 변화 요인 이외에도 양국간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불변의 요소들도 존재함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우선 중국이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북한에 사회주의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해 대외적 고립감과 체제위기감을 느끼게 된 중국으로서는 접경지역인 북한에서의 정치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북한에서의 체제변혁 움직임의 여파가 내몽고나 티베트, 대만이나 홍콩 등지에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유지에 최소한의 도덕적 또는 상징적 지원만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의 유대를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결국 북한의 모험주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로 북한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중국이 자동 개입할 의무도 지원할 의사도 없

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증명된다.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한 한중 및 한러수교 이후 증대된 북한의 국제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남북한 문제는 당사간의 해결이 최선의 원칙임을 주장한 것도 바로 북한의 고립이 한반도 안정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또한 가지 요인은 바로 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중국의 진북기도라는 화평연변(和平演變)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는 보수파들은 북한과 중국의 이념적 결속과 유대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파의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중국 자신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북한정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은 한반도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 및 러시아의 독자적 또는 중국을 배제한 세력들간의 연합세력 구축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강대국들에 의한 주도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중국의 의도는 제한적인 군사무기만을 제공

하고 북한 군부와와의 긴밀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하면서도 군사동맹의 강화나 안보조약의 체결과 같은 조치를 통한 대북 영향력 유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VI. 결론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특정 현안에 편향된 정책보다는 다각적인 교류나 협력의 증대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통한 북한문제의 해결이 한계를 드러낸 현 상황에서는 대중국정책 전반에서 북한해 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유도가 정책의 기초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중국의 불통불난(不統不亂)이라는 기존 대한반도 태도가 조만간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북한의 모험주의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중국은 이러한 남북한 등거리외교와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중국이 이를 반대할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니나 단지 자국의 동북아 정책이나 한반도정책 기조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부력에 의한 통일이나 외세에 의한 간접적인 통일은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곧 남북한 당사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의 지지를 의미한다. 현재 남한에 의한 북한체제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나 기정사실로 될 경우에도 외세의 개입은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김일성 사후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양국이 우려할 정도로 소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계구도 가시화에 대한 중국의 묵시적 승인이 곧 북한의 승계방법이나 김정일 개인에 대한 명시적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묵인은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며 국익을 우선한 중국의 고도의 정치적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역내 잠재적 현상타파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체제에 대한 승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외교의 기본 목표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 중국의 외교정책 또한 이러한 국익의 극대화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상충하는 국익 속에서 중국과 한국 관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국의 현실적인 등거리외교의 실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